

[서식 예]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(중여계약 취소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○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○)
 전화·휴대폰번호:
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와 소외 ◇◇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○○. ○○. ○. 체결된 중여계약을 취소한다.
 2. 피고는 소외 ◇◇◇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○○등기소 20○○. ○○. ○○. 접수 제○○○○○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 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소외 ◇◇◇는 중학교 때 친구로 평소 친하게 지내다 소외 ◇◇◇의 남편

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20○○. ○. ○. 소외 ◆◆◆에게 금 30,000,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. 그런데 소외 ◆◆◆는 위 돈의 변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여 원고는 부득이 소외 ◆◆◆를 상대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가단 ○○○○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○○. ○. ○○.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(갑 제1호증-소장, 갑 제2호증-집행력있는 판결문)

2. 한편, 소외 ◆◆◆는 위 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○○. ○○. ○.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(갑 제3호증-부동산등기부등본)
3. 채무자인 소외 ◆◆◆의 위와 같은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.
4.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피고와 소외 ◆◆◆와의 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사해행위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.

증 명 방 법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갑 제1호증 | 소장 |
| 1. 갑 제2호증 | 집행력있는 판결문 |
| 1. 갑 제3호증 |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|
| 1. 갑 제4호증 | 토지대장등본 |
| 1. 갑 제5호증 | 건축물대장등본 |

첨 부 서 류

- | | |
|-----------|------|
| 1. 위 증명방법 | 각 1통 |
| 1. 소장부분 | 1통 |
| 1. 송달료납부서 | 1통 |

20○○. ○. ○.

위 원고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[별 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○○○아파트 제6동
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의 번호 : 6-1-103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1층 103호 35.0m²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 4003m²

대지권의 종류 : 위 토지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4003분의 36.124. 끝.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척기간	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(민법 제406조 제2항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분 제출	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 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.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법 제406조 제1항). ·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,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임(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50985 판결). ·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,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,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(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다29916 판결). ·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,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음(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3717 판결). ·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고,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하여진 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의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음(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다14108 판결). 		

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3.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현행 민사소송법 제21조에 규정된 「등기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」이라고 할 것이므로,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,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음(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마1156 결정).
4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위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